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가단체 총 25개] 2025. 5. 8. 9시 기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넥스트네트워크, 니트생활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청년들,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성북청년시민회,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심오한연구소, 아디주 커뮤니티,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진하는 민주주의 VALID, 청년광장, 청년실험추진위원회,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오픈플랫폼 Y,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소개 페이지](#) | [제안문](#) | [트위터\(X\)](#)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교육부
발 신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담당 : 이한솔 운영위원장, 010-3012-3854, tigeryouth.action@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간담회 개최
날 짜 2025. 5. 9. (별첨 포함 총 5쪽)

보 도 자 료

범청년행동,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청년본부와 정책 간담회 개최

청년 담론과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한 제21대 대선 시리즈 간담회

1.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25개 청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하 범청년행동)은 오늘(5/9), 이대 근처에 위치한 ‘계절의 목소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청년본부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 사회자로 나선 민선영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은 “이 정책 간담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릴레이 간담회 중 첫 순서로, 2030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을 대선 국면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정책 간담회는 범청년행동이 △정치개혁, △인권, △안전사회, △노동, △젠더, △복지, △주거, △기후, △자립, △자산, △지역, △참여 거버넌스 등 12개 분야에서 46개 정책을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묻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한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광장 밖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가 기성 정치에 대한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청년을 포함한 다채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함과 동시에, 불평등의 관점에서 정치를 풀어낼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젠더 갈라치기, 각자도생 및 개인주의라는 청년을 향한 기존 이미지에 천착하기 보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친구들을 떠나보내며 '같이 살자'고 다짐한 광장의 주체로서의 청년에 집중하자"며 "불평등과 차별의 관점에서 청년 담론과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청년광장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존엄하게 살아가고, 누구도 재난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 윤석열 다음의 세상"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자율성, 다양성,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보호 마련을 피력했습니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책임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의 규범회피 행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추정원칙 도입,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에게도 사회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망 안에서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이재정 윤퇴청 대표는 "아픈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고 있는 청년인 '영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케어러 문제는 아동·청년정책으로만 다루지고, 제한적인 서비스와 그들을 위한 사례관리만 잘 이뤄지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적 복지의 확충과 통합적 서비스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채용 성차별 근절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페미니즘 사상검증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광범위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불법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지우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디지털 성폭력 특성상 현행의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처벌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대표는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공약은 부재하다"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의욕적이고 야심찬 감축목표를 대선 공약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하는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새로운 대통령의 기후 리더십을 국제사회가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가구 중 81%가 세입자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중 75%가 청년이다"라며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입자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임대시장 감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임대주택에 등록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지를 늘려나가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첫해부터 5조 7천억이나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구하고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혜민 성북청년시민회 사무국장은 "기존 근대적 삶의 경로 외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긍정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청년기본법 이후 새로운 청년정책 입법 과제로써 '사회적 자립' 개념을 제안한다.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관계와 가구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이 포함된 '사회적 자립' 개념 정립 및 청년정책 체계 통합의 내용을 담은 (가)사회적 자립 기반 지원법 제정을 요청한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진로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자립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확대를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청년 담론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삶을 주목하고 드러내지 않은 채, 지역 소멸 '위기' 담론으로 머문다."며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살고 싶어 하는 청년, 떠나기 싫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 청년의 정책 결정 실효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요구안으로 "지자체 청년참여기구 허브 전담 조직 신설,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청년 쿼터 권고, 국민참여예산제 비수도권 지역 청년 참여 예산 쿼터 도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3.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김철규 윤퇴청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에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적혀져 있다고 언급하며, "탄핵을 계기로 시작된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빛을 진 셈이다. 시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청년본부 공동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승리시 상시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 범청년행동은 앞으로도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고자 정책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광장의 중심이었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탄핵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정부에도 반영되고, 불평등의 관점에서 청년 담론과 정책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끝.

▣ 별첨자료1. [<불평등 묻어가는 범청년행동> 12대 분야 46개 정책 과제 자료집 \(클릭\)](#)

▣ 별첨자료2. 정책 간담회 현장 사진

▣ 별첨자료2. 정책 간담회 현장 사진



